SP 2026-7-4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7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 **주제 :**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 **일시 :** 2026년 11월 25일(수) 14:00 ~ 16:20
* **장소 :** 호텔 아트리움 서울 종로, 그랜드볼룸
* **주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후원 :**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프로그램

개요

□ 주　　제: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4:00~16:20
□ 장　　소: 호텔 아트리움 서울 종로, 그랜드볼룸
□ 주　　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후　　원: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사회 및 좌장
13:30~14:00(30')	■ 등 록	**사회** 김정희 (대교협 정책연구팀장)
14:00~14:10(10')	■ 개 회	
14:10~15:10(60')	■ **주제발표 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의 질 관리** - 발표자: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김태훈 서기관	
	■ **주제발표 2**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 발표자: 법무부 체류관리과 용창식 사무관	
15:10~15:20(10')	■ **휴 식**	
15:20~16:20(60')	■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지은 VERUM교양대학 학장 - 경북대학교 이　학 국제처장 - 동서대학교 정주연 국제처장 - 동신대학교 조요한 국제교육원 부원장 -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이형주 국제협력위원장(호서대 교수) - 한양대학교 김현주 국제입학팀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정은 국제협력팀장	**좌장**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16:20	■ **폐 회**	

※ 세부 프로그램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음

CONTENTS

주제발표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의 질 관리 ····· 1

김 태 훈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서기관

주제발표2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 15

용 창 식 |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종합토론

김 지 은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학장 ····· 29

이　　학 | 경북대학교 국제처장 ····· 35

정 주 연 | 동서대학교 국제처장 ····· 43

조 요 한 |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 부원장 ····· 49

이 형 주 |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국제협력위원장(호서대 교수) ····· 57

김 현 주 | 한양대학교 국제입학팀장 ····· 65

이 정 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팀장, 국가학위정보센터 ····· 73

주제발표 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의 질 관리

김태훈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서기관

30만 유학생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

유학생 유치 규모의 확대를 넘어,
수준높은 학습과 삶의 경로 설계를 지원하는 국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2026. 11.

0. 추진배경

유학생 정책 환경, 시간적 관점

"27년까지
30만 유학생 유치 "
StudyKorea 300K Project('23)

30.7만
2026년 4월 유학생 수

2029년
제5주기 인증제 개편시점

"유학생 정책,
이렇게 해보려 합니다 "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26)

새로운 장기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제시해야 할 시점

02

0. 추진배경

개선되는 유학생 관련 지표

유학생 중도탈락율

7.1%('24) → 5.8%('26)

유학생 취업률(국내)

21.7%('23) → 33.4%('24)

유학생 상위학위 진학률(국내)

13.7%('23) → 15.6%('24)



출처: QS Best Student Cities 2026-2027; 교육부 혁신전략 p.13~14 (연구재단 설문)

03

0. 추진배경

한국 유학의 성장 뒤에 남은 고민

사회 | 교육

조선일보 | 2026. 5. 6

"수업은 하루, 나머진 알바하세요" 대학들 유학생 쟁탈전

조선일보 | 2026. 11. 4.

"월 500만원 번다" 유학 와서 '불법 배달' 뛰는 외국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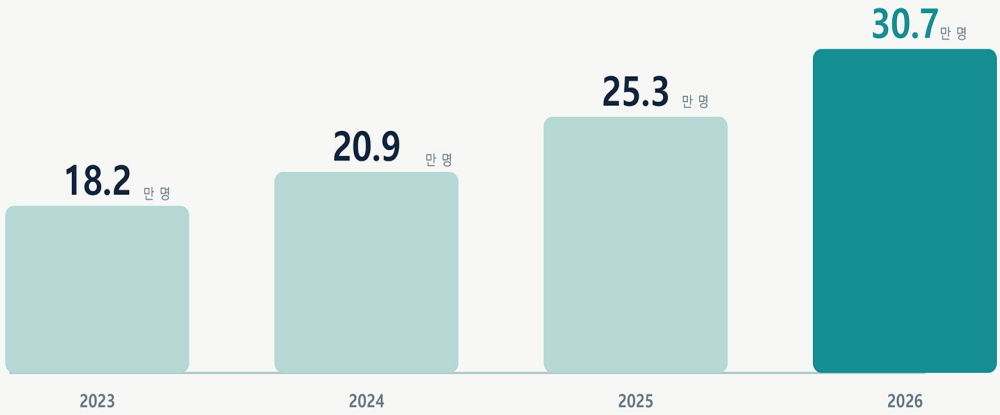
- 유학생 30만 시대, 한국 유학의 목적이 정말 "교육과 학습" 일까?
- 모집 경쟁, 교육 경쟁의 형태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 "외국인 유학생" 정말 하나의 집단일까? / "한국 유학"은 어떤 모양일까?

04

0. 추진배경

새로운 고민과 출발선이 되어버린, 기존 목표

2023.8 **Study Korea 300K Project** 2027년 30만 유치 목표 → 2026년 조기 달성



KEDI 교육통계, 매년 4.1. 기준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 → **"어떤 교육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야하는가?"**

05

0. 추진배경

'유학생'의 정체성과 정책방향

留	學	生
머무를 유	배울 학	날 생
유치	**교육**	**삶(진로)**
멀리서 한국으로 와서 머무르고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고	의미있는 다음 삶으로 나아가는 일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에 힘쓰고"**	**"유학생의 성장을 같이 고민"**

06

0. 추진배경

유학생도 대학에게도 필요한 선순환 : 국제신뢰

01 유치 / 입학
정확한 정보제공 · 공신력 있는 선발

→

02 교육 / 학습
교육의 질 · 학습경험의 향상

→

03 진로 / 생활
생활 · 취업 · 진학 지원

학위의 국제통용성 확보 → 유학생이 찾아오는 한국 대학

07

0. 추진배경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 선순환을 설계하는 네 가지 전략

비 전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국제교육 허브 대한민국

목 표 우수 인재의 유치 · 성장 · 진출이 이어지는 글로벌 인재 선순환체계 구축

4대 전략

1	2	3	4
① 유치·모집 신뢰도	② 교육의 질	③ 적응·진로지원	④ 우수인재 양성
해외학위 검증 모집·선발 책무성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부실대학 제재 강화	생활·적응 지원 맞춤형 취업정보	전략적 장학지원 우수학과·네트워크

추진기반

법적 기반 확립
유학생 정책 책무 · 지원기관 · 인증제 근거

지역 발전과 연계
중앙-지자체-대학 협업 · 지역산업 연계

08

1. 유치

유치 : '입학 전'부터 형성된 신뢰로 유학생의 심리적 장벽 낮추기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제정

허위학위로 입학하는 학생이 없도록 입학 절차의 표준화 추진

서류 점검 → 자격 평가 (위원회 심의) → 집중 검증 → 결과 통보

KARIC(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의 학력·학위 확인 관련 정보제공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 안내

한국 유학의 시작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학원-대학의 책임관계 명확화

- 허위·과장광고 제한 — 정확한 정보 제공
- 등록금 직접 환불 — 학생 보호
- 모집과정 모니터링 — 유학원 일탈 방지

09

1. 유치

유학박람회에서 Study in Korea까지, 공공 유학경로 넓히기

유학박람회

유학생이 현지에서 한국유학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	지자체 연계	특화형
현지 학생 수요	지역·대학 협업	분야별 안내

B2B 박람회 확대 | 2025·26년 7개국 → 2027년 10개국 목표

Study in Korea

찾아보고, 비교하고, 지원까지 한곳에서

01 대학 탐색 › 02 정보 비교 › 03 원서접수 › 04 상담 연계

- 대학·학과·장학금 정보 통합 탐색
- 온라인 지원·전형료 결제 등도 연계(대학별)
- AI KORI 다국어 상담 등으로 문의 가능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정보, 신뢰성 있는 공공 경로 확대 → 학생의 선택권과 모집 투명성 제고

10

2. 교육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현재

제4주기(2025~2028) | 대학의 유학생 관리·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조사 결과를 비자제도와 연계

인증심사 신청형 · 재적 20명 이상

무엇을 평가하나?

- A **전략·선발** 국제화 전략, 입학·모집의 적절성
- B **학업·관리** 학습 지원, 생활·진로 지원, 한국법령 교육
- C **성과** 중도탈락·공인언어능력·학생 만족도

실태조사 필수 · 재적 1명 이상

최소 기준을 점검하고, 운영상 문제를 확인

- **평가지표** 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언어능력 충족률 등
- **미달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 **현장 확인** 실제 유치교육 관리 실태는 현장점검으로 확인

평가 · 실태조사 결과 → 비자발급·심사 기준 차등 적용

우수인증대학	인증대학	일반대학	컨설팅 대학	비자 정밀심사대학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발급 · 대상국 확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발급(일부 예외)	학력·재정능력 등 일반 요건 심사	면담 등 정밀 심사	비자 발급 원칙적 금지

인증대학 | 미인증대학 · 실태조사 대상

11

2. 교육

교육 : '교육의 질과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는 인증제

4주기 | 2025~2028		5주기 | 2029~2032
기본요건(불법체류율, 1개) 필수 충족	→	주요지표(4개) 필수 지표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	학습·교육성과 + 개선 노력
공인언어능력 충족률 40% (2026)	→	2029년 55%, 2023년 60% 단계적 상향
대학평가 연계 부족	→	기관평가 미인증, 경영위기연속대학 유치제한

공인언어능력 충족 비율 상향

대면교육 등 학사관리 지표 신설

기관평가 미인증대학 등 신규비자 제한

현장점검 강화

12

2. 교육

인증제 : 교육 신호등에서 더 나아가 정책의 분기점으로



우수

홍보·행정지원 확대

높은 성과에 따른 긍정적 신호



개선 필요

컨설팅 · 점검 · 개선

교육여건 정상화 지원



기본요건 미달

비자심사 강화·제한 추진

유학생 모집 제한

인증제를 교육 중심 평가로 개편, 부실대학은 유학생 모집 제한 → 유학생이 믿고 선택하는 한국 고등교육 확립

13

3. 진로와 생활

유학생 생활 :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53.9%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한다"

15.1%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의 도움을 받는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만족도 조사(26)

14

3. 진로와 생활

진로/생활 : '내게 맞는 다음 선택' 찾기

01

기본정보 습득

취업 가이드북 등 안내자료

채용절차 · 직종 · 비자 · 직장문화

→

02

진로·진학 정보 제공

맞춤형 취업공고 등

관심 지역 · 직무 · 고용형태 설정

→

03

AI·전문상담 연결

AI KORI 24시간 상담

다국어 1차 안내 → 심층상담

대학별 상담 및 지원 체계

'개별 유학생의 삶'에 맞춘 지원 추진

15

3. 진로와 생활

취업·정주, 대학 현장에서 확인한 두 가지 모델

제1회 유학생 취업·정주 우수사례 공모전

01 지역 연계 · 밀착지원

OO대학교

해외 현지 유치부터 지역기업 취업·정주까지

해외 유치	›	기업 연결	›	정주 지원
새만금한글학당		도내 1:1 매칭		지역특화비자 등

54명 (42.8%)
졸업생 중 취업자

85명 (67.5%)
도내 정주자

02 역량 인증 · 경력지원

OO대학교

OOO-PASS : 핵심역량과 이수 현황을 체계화해하고, 구직활동에 연계 추진

역량 개발	›	경험 축적	›	역량 인증
한국어·진로설계		문제해결 프로젝트		디지털배지 발급

196건 → **527건**
학기당 프로그램 참여 실적

16

4. 우수인재 양성

우수인재에게는 성장의 사다리를

기본수준 | "한국 유학"에 기대하는 양질의 학습

공정한 입학 · 양질의 수업(학습) · 명확한 진로와 생활정보 제공

집중지원 | 전략분야 우수인재 양성 확대

GKS R&D · K-STAR 연구비자 · 우수학과·교육과정 발굴 ·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17

4. 우수인재 양성

우수인재의 유치 · 성장 · 진출, 세 가지 연결 전략

01 이공계 인재 확대

GKS R&D 이공계 선발·장학 강화

K-STAR 비자

32교 BK21 27교
국립과기원 5교

우수 연구인재의 국내 성장·진출 지원
총장 추천을 통한 거주비자(F) 연계
<**법무부 협업**>

02 우수교육과정 발굴

대학 기관인증을 넘어
우수학과·전공 발굴

우수학과 발굴 교육·연구 역량 검증

산학협력 연계 기업·지역수요 반영

인재양성 확산 선도교육모델 확산

우수학과 인증 : 年 10개 이내(안)

03 동문 네트워킹

한국학 국제학술 교류

한국유학 경험 학자·학생 연결

GKS 동문 네트워크

국내외 동문회·교류 활동 확대

연구·진학·취업 정보 공유로
우수인재의 진출 경로 확대

우수인재 양성 확대 → 국가경쟁력 · 지역발전동력에 기여

18

5. 거버넌스와 미래

‘정책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 추진

① 국가·대학의 책무

기본계획 · 권익보호 · 관리책임

② 인증제의 정책적 활용

평가절차 · 결과 공시 · 행정연계

③ 전문 지원기관 지정

유학생 지원 · 학위검증 지원

④ 실태조사·시정명령

정책의 실현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국가와 대학의 역할 명확화, 실효적 정책수단 확보, 미래를 준비하는 거버넌스 규정 등 추진

19

5. 거버넌스와 미래

‘정책·지원·데이터’가 한 번에 작동하는 미래거버넌스

정책방향 제시/제도 설계

교육부 · 관계부처

대학현장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 NIC · 지자체

데이터/통계

학생 · 졸업생 · 기업 정보

20

5. 거버넌스와 미래

추가 질문 : '유학'이라는 선택, 전혀 다른 세 개(네 개)의 목적지

01 **한국 정착**

한국 취업 · 상급학교 진학

02 **본국으로 복귀**

고향에서 취업 · 창업 · 진학

03 **제3국 진출**

영미권 등 상위과정 진학

21

5. 거버넌스와 미래

학생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을 어떻게 달리 해야할까?

지원 전

지원 동기·희망 경로

자발적 설문 · 진로정보

→

재학 중

학업·경험 변화

상담수요 · 학습성과

→

졸업 후

실제 진로의 이동

취업 · 진학 · 귀국 · 동문네트워크

종단적 정책연구, 미래형 거버넌스 → 유학생이 희망하는 삶의 경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학습지원 필요

22

5. 거버넌스와 미래

신뢰를 완성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2030?

신뢰 가능한 유학국가

투명한 모집 · 교육의 질/학습 인프라 · 생활/진로정보 제공으로 우수 인재가 신뢰하는 "한국 유학" 브랜드 확립

2035?

글로벌 인재순환 허브

한국 유학과 국내외 진학/취업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구조로 해외 우수 인재 학습생애의 한 축으로 기능

23

주제발표 2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용창식 |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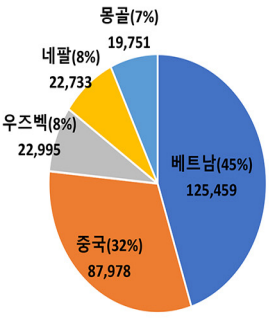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은 「 필수전략 유치그룹 」

❍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적응력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국가·산업·지역 발전에 필요한 「필수 전략 유치 그룹」에 해당**

-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넘어 **'누구를 어떻게 유치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로 이제는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 필요**

※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을 구성('26.4.20)하여 대학, 이민 전문가와 함께 유학생 비자 정책을 설계

유학생 국적별 현황(상위 5개국)



그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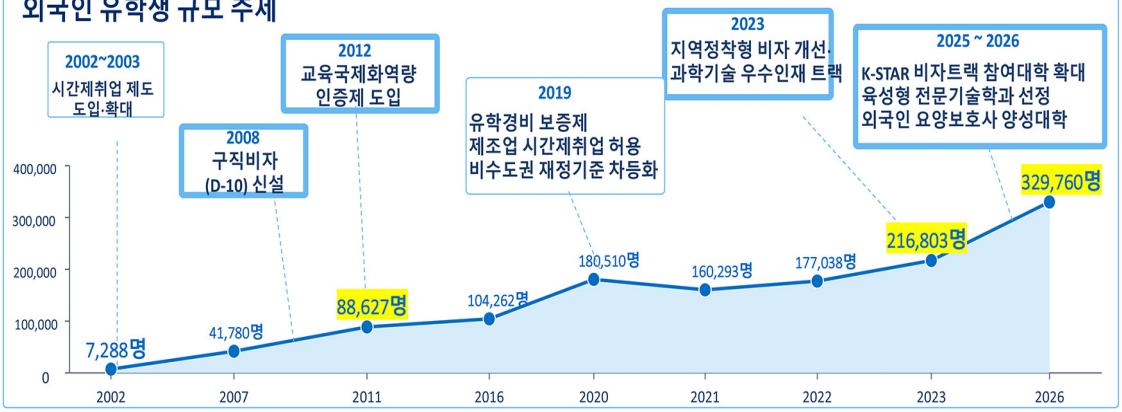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02~26)>

정책 단계별 주요 특징

2002~2010	2011~2019	2020~2026	2026~
유치·체류지원 기반 형성	질 관리 제도화·선별 유치	유학생 취업 정주 정책 본격화	전주기 인재 관리 비자 정책

중국·동포 중심 정책에서 국적 다변화, 코로나19 이후 국내 유학생 활용 확대, 지역 정착과 全주기 인재전략으로 정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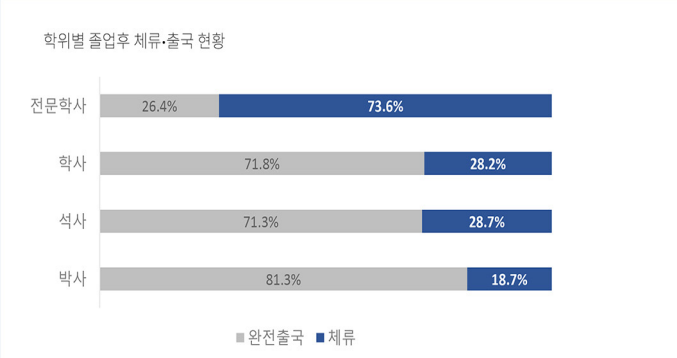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규모 추세



정책 환경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정책 전환

그 간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취업·정주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체류자격 기준 취업률

34.3%

2019~2025년 학위과정 졸업자 중 졸업 직후 완전출국자를 제외한 취업 체류자격 전환 비율

고용보험 가입 기준 취업률과 산출방식이 다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월 31일 기준 · 범위: 유학(D-2), 어학연수(D-4-1·D-4-7)

02

추진 전략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비전 우수 유학생 선별적 유치·관리와 정주 기회 확대

목표 외국인 유학생에 특화된 단계별 이민경로 설계

01 選 유입	02 育 체류·성장	03 共 취업·정주
준비된 유학생의 선별 유치	체류관리에서 육성·지원으로 전환	역량을 갖춘 인재의 기회 확대
재정능력·학력·한국어능력 입국 전 검증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실성 기준 제도 운영	취업·창업·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 제시

04 행정 지원 — 전체 유학생 제도 인프라 기반 마련

핵심 추진전략

1) 한국어 능력의 비자 전반 반영 2) 유학목적 검증과 교육의 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3) 데이터 기반 유학생 정책 및 통계 지원 4) 인재 스펙트럼별 경로 설계 5) 지역발전·산업수요 연계

추진분야 1

유입

1-1

유학생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입국 전 실질적인 재정능력 검증, 재학 중 성실 유학생의 재정입증 부담 완화

현행 문제점 잔고증명 돌려막기와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능력 검증에 한계

입국 전: 재정능력 입증 방식 차등화

한국어 능력에 따른 재정입증 방식 도입

한국어 능력 미보유자 보증금제* 확대 검토

재학 중: 성실 학습자 부담 완화

한국어 능력·학업 성실성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재정입증 면제 등 검토

*보증금제 예시: 현지 예치 → 국내 계좌 송금 → 재학 증빙 후 학기별 분할 인출

추진 과제

1-1-1	한국어 능력 기반 재정능력 입증방식 도입	'26.下
1-1-2	한국어 능력 미보유자 유학경비 보증금제 확대	'27.上
1-1-3	재학 중 재정능력 입증 부담 완화	'26.下

추진분야 1

유입

1-2

표준화된 해외학력 및 학업능력 검증체계 구축

대학 입학심사부터 비자발급, 사후 재검증까지 표준화된 학력 검증체계 구축

현행 문제점 국가별 학제와 서류형식 차이로 위·변조 여부와 학업능력의 일관된 검증 어려움

01	02	03
대학의 사전검증	비자발급 단계 검증	관계부처 합동 재검증
입학심사 단계에서 학위·학력 서류의 진위와 학업능력을 대학이 먼저 사전 검증	국가학위정보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 학위·학력 검증 절차 정비	주요 국가 학위 정보 DB 기반 발급 이후에도 법무부·교육부 합동 재검증 실시

국가별 학제·위조사례 DB의 FIMS 공유 및 담당자 교육 / 한국어 기준 단계적 강화 검토

추진 과제

1-2-1	비자발급 시 표준 학위·학력 검증절차 마련(교육부 협업)	'26.下
1-2-2	주요 국가 학위정보 DB화(교육부 협업)	~'28.上
1-2-3	비자발급 시 한국어 능력요건 강화(인증대 여부 불문)	'27.上

추진분야 1

유입

1-3

해외 유학원 관리 방안 마련

대학-법무부-재외공관이 협업하여 현지 유학원을 신고, 공개, 관리하는 해외 유학원 등록제 시범실시

현행 문제점 유학원의 과도한 수수료, 부정확한 유학 정보, 허위서류 작성 등

01	02	03
유학원 정보 양성화	단계적 시범운영	평가 및 환류
• 대학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시 FIMS에 유학원 정보 필수 입력 • 해외 유학원과 표준 계약서 작성	재외공관- 등록 및 정보 관리 유학원- 한국 유학 준수사항 교육	불법행위 적발 사례 공유 및 현지 법령에 따른 대응 연계

재외공관 중심의 단계적 유학원 관리 체계 개편 (외교부 협업)

추진 과제

1-3-1	(가칭) 해외 유학원 등록제 시행(외교부 협업)	~'27.下
1-3-2	표준입학허가서에 유학원 정보 필수 입력	'26.下
1-3-3	불법 브로커 관리 강화(외교부 협업)	'27.上
1-3-4	해외 유학원 등록 시 교육이수 의무화(외교부 협업)	'27.上

추진분야 1

유입

1-4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유학비자 유형 다변화

학위과정 중심의 기존 유학비자를 단기유학, 갭이어, 온라인·하이브리드 과정까지 확장

현행 문제점 현행 대면·학위과정 중심의 비자 체계와 단기·비학위·원격 학습 수요 간 불일치

단기유학(D-2-8) 개편	해외 학생의 국내 비학위·단기 학습수요에 맞춘 대상·체계 정비
갭이어 학생 비자 신설	대학 입학 전 한국어 학습·대학 학점 이수 등 학습경험 지원
온라인 복수비자 신설	해외거주 온라인·하이브리드 과정 등록자의 대면수업·시험 등 단기 입국 지원

추진 과제

1-4-1	단기유학(D-2-8) 비자체계 개편	'26.下
1-4-2	갭이어 학생 비자 신설	'26.下
1-4-3	온라인 과정 등록자 전용 복수비자 신설	'27.上

추진분야 2

체류·성장

2-1

한국어 능력 기반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실성을 기준으로 시간제취업 절차 단계적 합리화

현행 문제점 시간제 취업 신청 절차의 복잡성, 심사 소요 기간, 미신고 취업, 학업보다 취업 우선 사례 등

1단계 · '26.下	2단계 · '27.上	3단계 · '27.下
허가기준 정비	대학 확인서 기반 처리	포괄적 허가 시범 도입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실성을 중심으로 허가 요건 및 절차 간소화	대학의 사전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근거로 신속 처리	일정 요건 충족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전 포괄적 사전허가 시범 도입

대학 관리역량·한국어 능력·학업성적 등 일정 요건과 노동시장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추진 과제

2-1-1	1단계 시간제취업허가 요건 정비	'26.下
2-1-2	2단계 대학 발행 확인서 기반 허가 처리	'27.上
2-1-3	3단계 포괄적 시간제취업허가제 시범 도입	'27.下

추진분야 2

체류·성장

2-2

한국어 능력에 따른 구직(D-10) 기간 차등 부여

일률적인 구직기간 부여 방식에서 한국어 능력과 인재 특성에 따른 기간 차등 부여 방식으로 전환

현행 문제점 장기간의 구직기간이 단순 체류 연장이나 비전문 취업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한국어 능력 충족자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최대 3년 부여(1년+1년+1년)	최대 2년 부여(1년+6개월+6개월)
한국어 능력 검증을 통한 구직활동 우대	점수제를 적용한 구직 기간 부여

이공계 및 지역 졸업생은 전공과 취업 연계성을 고려한 별도 우대 적용

추진 과제

2-2-1	한국어 능력 기반 구직비자 재설계	'27.上
2-2-2	이공계 및 지역 졸업생 우대	'27.上

추진분야 2

체류·성장

2-3

유학생 특화 실무형 기능비자 발굴

학위와 현장역량에 맞는 취업·정주 경로 마련을 통한 실무형 인재 활용 확대

현행 문제점 기존 취업비자 체계가 사무직 또는 전문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현장 실무 인재의 정주 연계 부족

전문학사	기능·기술인력	D-2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확대
일반학사	전문·기술직 인재	기존 취업비자를 활용한 전문·기술직 취업경로
석·박사	고급·연구인재	전문기술석사: D-2 → E-7 → F-2로 연결되는 K-TECH Master 경로

학위 외 한국어 능력·학업성과·전공·취업 직종 및 개별 체류자격 요건 충족 시 적용

추진 과제

2-3-1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전환 확대	'27.上
2-3-2	K-TECH Master Visa 신설	'27.上

※ 학위 외 한국어 능력·학업성과·전공연계성·취업 직종 및 개별 체류자격 요건 충족 시 적용

추진분야 3

취업·정주

3-1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 관리

유학 결정부터 졸업, 취업·창업, 거주와 영주까지 예측 가능한 비자 성장경로 제시

현행 문제점 학위·전공·역량별로 복잡한 비자 전환경로와 졸업 이후 진로의 불확실성

유학(D-2)
학위·역량 형성

↗ 취업경로
구직(D-10)·취업(E-7)

↘ 창업경로
준비·창업(D-8)

↘ ↗ 거주(F-2)·영주(F-5)
역량·성과·개별 요건 충족

*구직·거주 단계는 모든 경로의 필수 경유단계가 아니며, 각 자격요건 충족 시 전환

*(전문)학사·석·박사의 경로는 학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한국어 능력·학업성과·전공 연계성·취업 직종·지역 기여 및 개별 체류자격 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추진 과제

3-1-1	유학생 비자 성장사다리 설계	~'28.上

추진분야 3

취업·정주

3-2

졸업생 취업연계 및 글로벌 순환인재 체계 구축

졸업 유학생 국내 취업지원과 귀국 유학생 네트워크 관리 경로 구축

현행 문제점 기업·유학생 간 취업정보의 비대칭과 귀국 졸업생 네트워크의 단절

경로 1
국내 취업지원
직종별 유학생 취업비자 체크리스트 제작
맞춤형 취업정보·채용기업 행정절차 지원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연계

경로 2
귀국 후 글로벌 순환인재
국내 학위 취득 이후 귀국 유학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귀국 졸업생 네트워크 지속 관리 및 재입국 지원

협업: 중기부·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 / 복수비자 발급은 검토 과제

추진 과제

3-2-1	유학생 취업비자 체크리스트 제작	'26.下
3-2-2	실질적인 취업지원 연계모델 개발(중기부, 노동부, 교육부 협업)	~'28.上
3-2-3	졸업 후 귀국한 유학생에게 복수비자 발급	'27.上

추진분야 3

취업·정주

3-3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원

지역 산업수요에 맞춘 유학생 유치와 졸업 후 지역 취업·정착 연계

현행 문제점 지역산업 수요와 대학 전공의 연결 부족 및 취업 이후 가족·생활 정착지원의 한계

01 지역대학	02 인재양성	03 지역기업 취업	04 지역정착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유학생 유치와 광역형 유학비자 설계	광역형 비자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양성과정 운영 검토	전공·역량과 지역 구인 수요 연결, 추천 우선순위 또는 가점 부여 검토	F-2-R 및 동반가족 정착 지원 등 연계 검토

지역 수요 → 대학 교육 → 지역 취업 → 정착의 연계 / 추천 우선순위·가점 등은 검토사항

추진 과제

3-3-1	지역산업 수요 기반 광역형비자 재설계	'26.下
3-3-2	유학생 지역정착 시 비자혜택 확대	'26.下
3-3-3	이민정책 설계 시 지역 우선 고려	'26.下

추진분야 3

취업·정주

3-4

유학생 창업 활성화 및 정주 연계

재학 중 창업준비부터 기술창업비자 전환과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창업경로 구축

현행 문제점 학업·창업교육의 분리와 재학 중 사업자등록·초기 생계·재도전 지원의 연계 부족

01 창업교육	02 창업준비	03 비자전환	04 성장·재도전
OASIS 대학 연계 및 학점 인정 교육 과정 도입	역량·성장성 중심의 요건 완화 , 창업 준비기간 시간제취업 지원	기술창업비자로 전환	창업 진척도를 고려한 성실 실패자의 재신청 및 재도전 지원

대학의 학업·학점과 창업교육을 연계하여 재학 중 준비부터 기술창업 전환까지 지원

추진 과제

3-4-1	기술창업교육(OASIS) 대학 연계과정 도입	'27.下
3-4-2	재학 중 사업자등록 허용 등 유학생 창업비자 요건 완화	'27.上
3-4-3	기술창업 준비 외국인에 대한 시간제취업 허용	'26.下
3-4-4	기술창업 성실 실패자의 창업 재도전 지원(중기부 협업)	'27.上

추진분야 4

행정지원

4-1

유학생 비자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역별로 분산된 비자·체류·취업·정착 지원기능의 권역별 전담체계 연계

현행 문제점 담당인력 부족·잦은 교체·지역별 처리방식 차이 및 취업·정착 지원과의 연결 한계

중앙권	경기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분산된 비자업무 연계

권역별 전담체계를 통한 심사 집중 관리
일관된 업무처리와 전문성 확보

취업·정착 지원 연결

체류·비자 심사와 취업·정착 지원 연계
설치·운영 및 예산 확보 추진

추진 과제

4-1-1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운영	'28.下

추진분야 4

행정지원

4-2

유학생 관련 법령 등 규정 정비

출입국관리법 개정: 유학생 비자·체류관리와 공공목적 취업지원의 법적 근거 정비

현행 문제점 비자·체류관리 기준의 안정성과 대학·지방정부의 공공목적 취업지원 근거 보완 필요

비자·체류관리 규정 정비

유학생 비자발급·대학 초청자격·시간제취업 등 주요 관리사항의 법률상 근거 마련 추진

공공 기관 취업지원 규정 정비

대학·지방정부의 유학·구직자격 소지자 대상 취업지원 활동을 위한 규정 정비 추진

교육부의 관련 제도 정비와 협업

추진 과제

4-2-1	유학생 비자관리 규정 신설,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27.下
4-2-2	유학생 취업알선 규정 정비,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27.上

추진분야 4

행정지원

4-3

데이터 기반 유학생 관리

유학생 규모와 체류성과 정례 분석, 대학별 관리역량과 비자정책 연계

현행 문제점 유입규모·대학 관리여건·취업 및 정주 성과를 함께 판단할 데이터 기반의 부족

01	02	03	04	05
데이터 수집	정례 분석	적정규모 판단	관리역량 평가	정책 환류
비자·체류 이력과 학업·취업 정보	지역·국적·비자·체류 통계 정기 공표	유입 영향과 교육·관리여건을 분석하여 확대·축소 방향 검토	대학별 비자관리 역량과 비자정책 개선의 연계 체계 마련	평가결과를 정책·관리기준에 반영

추진 과제

4-3-1	유학생 비자·체류 통계 정기 공표	'27.上
4-3-2	유학생 적정규모 관리체계 마련	'27.下
4-3-3	대학별 유학생 비자관리 역량 평가	'28.上

추진분야 4

행정지원

4-4

외국인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FIMS) 고도화

대학 업무편의, 유학생 온라인 민원, 경력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

현행 문제점 증가한 유학생 데이터와 대학 행정수요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시스템 기능·처리용량

FIMS 정보 연계

→	대학 업무편의	입학허가서 일괄 생성·변동신고 일괄 등록
→	유학생 온라인 민원	방문·서류 부담 및 학업 공백 완화
→	통합 프로파일	자격·한국어·사회통합·고용 이력 기반 경력관리

FIMS를 중심으로 대학·유학생·출입국행정 정보 연계 / 개인정보 보호 및 관계기관 협업

추진 과제

4-4-1	대학 담당자 이용 편의 개선	'28.上
4-4-2	유학생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28.上
4-4-3	유학생 통합 프로파일 생성으로 경력관리 지원	'27.下

추진분야 4

행정지원

4-5

유학생 비자 관리 강화

학업목적을 훼손하는 편법과정은 엄격히 관리하고 교육상 필요한 과정은 예외 인정 검토

현행 문제점 일부 외국어트랙과 주말·야간·온라인 과정의 교육의 질 및 유학 목적 훼손 우려

관리 강화 대상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주말·야간 과정
- 주 1일 집중수업
- 온라인 결합 등교일 축소
- 주간 취업 전제 과정
- 출신국 언어·통역 중심 과정

예외 인정 검토 유형 요건 충족 시

- 정부초청·인재양성 과정
- 공동·복수학위 시차수업
- 필수 임상·현장실습
- 대학원 연구·실험·세미나
- 재난·감염병 한시 보강

추진 과제

4-5-1	영어트랙 등 외국어 과정 관리 강화	'27.上
4-5-2	주말·야간·온라인 과정 관리 강화	'27.上

추진 로드맵

단계별 추진 로드맵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42개 실천 과제를 순차 추진

'26.下

우선 과제 착수와 제도 기반 정비

- 재정능력 입증방식 개선
- 표준 학력검증 절차 마련
- 시간제취업 1단계 개선
- 취업비자 체크리스트
- 지역산업 기반 광역비자 재설계

'27.上 ~ '27.下

제도화와 시범사업 확대

- 대학 확인서 기반 시간제취업
- 포괄적 시간제취업 시범 도입
- 한국어 기반 구직비자 재설계
- 창업·지역정착 경로 확대
-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28.上 ~ '28.下

데이터·시스템·전담지원 기반 구축

- 유학생 비자 성장사다리
- 비자·체류지원센터
- 대학별 관리역량 평가
- FIMS 고도화
- 통합 경력관리 기반 마련

유학생 정책을 준비된 인재의 선별·성장·취업·정주를 연결하는 전주기 인재정책으로 전환

종합토론 1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지은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학장

토론문 1

김지은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학장)

이번 두 발표에서 교육부는 '유학생'을 머무르고, 배우고, 다음 삶을 열어 가는 존재로 풀어내며 정책의 질문을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에서 "어떤 교육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로 옮겼습니다. 법무부 역시 '유치'에서 '성장과 정주'로의 비자 정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30만 명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 지금, 숫자 이후의 질문을 정부가 먼저 던졌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닿는 현장의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대학이 놓인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 현장의 관점에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무엇을 교육의 성과로 볼 것인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함께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디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입니다.

1. 먼저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입니다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아니라 교육성과와 개선 노력을 보겠다는 방향, 그리고 법무부가 학력, 재정, 한국어 검증을 입국 전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방향에 공감합니다. 한국 유학의 신뢰는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언어능력 충족률 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지표가 입학 시점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대학이 택할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받아 성실히 가르쳐 온 대학의 노력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입학 시의 '도달 수준'과 함께 재학 중 '향상 폭',

그리고 그 향상을 만들어 낸 대학의 교육적 노력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충족률을 입학 시점뿐 아니라 재학 중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논리는 언어능력의 기준과 수업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한국어로 공부하는 학부생, 영어로 연구하는 대학원생, 현장실습 비중이 큰 전공의 학생에게 필요한 언어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공통의 기초 수준은 분명히 확인하되, 입학 후 집중 한국어교육과 전공 및 직무 연계 교육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위과정과 전공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높아지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한 시점의 수치만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개선 추세를 함께 본다면,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대학이 그 노력을 인정받으며 높아진 기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께 여쭙고 싶은 질문도 있습니다. 제5주기 인증제에서 한국어 향상도와 대학의 교육적 노력, 그리고 연차별 개선 추세를 성과지표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한 기준 상향 과정에서 지방대학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이나 교육·행정 지원을 함께 설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좋은 학습은 안정된 생활 위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은 생활비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자리와 교통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할 합법적인 길이 가까이 없으면 학생은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렵고, 이는 학생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대학의 교육 성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점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시간제취업 개선, 즉 허가 요건 정비, 대학 확인서에 기반한 신속 처리, 포괄적 사전허가 시범 도입은 현장에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미신고 취업이 생기는 상당한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합법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 곧 불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수업과 과제를 충실히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

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오히려 이런 구조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신뢰할 만한 지역 사업장을 직접 연결하고, 시험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며, 임금체불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상담받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권 보호와 합법적 취업을 함께 이루는 모델이 지방에서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자리 잡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학이 지역과 함께 일자리를 연결하고 생활을 지원한 노력이 학생 지원의 성과이자 개선 노력으로 평가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역의 일자리나 교통 여건처럼 대학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도 함께 고려된다면 더욱 공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 확인서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거쳤다면 그 이후 개인의 일탈까지 대학의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야, 대학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재정능력 검증의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방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재정 기준에 지역별 생활비 차이가 계속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하는 장학금, 기숙사, 등록금 분납 같은 지원을 학생의 재정능력 일부로 인정해 주신다면, 학업 의지가 뚜렷한 학생이 재정 여건만으로 기회를 잃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법무부가 재학 중 성실한 학생의 재정입증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한 방향도 같은 맥락에서 반갑습니다.

대학, 지자체, 지역기업이 함께하는 합법적 일자리 연계 시범사업을 지방에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제안합니다.

3. 성장의 다음 경로입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광역형 비자 재설계, 지역 졸업생의 구직비자 우대, 지역정착 비자와 동반가족 정착 지원은 지방대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그러나 졸업생이 지역에 남으려면 좋은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통 같은 삶의 기반이 함께 있어야 하고, 이는 대학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지역 수요, 대학 교육, 지역 취업, 정착'의 연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단계마다 책임지는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과의 범위도 넓게 보았으면 합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의 많은 수가 졸업 후 완전출국합니다. 국내 취업과 정주만을 성과로 계산한다면 졸업생 열 명 중 일곱 명의

경로는 정책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에서 진학, 취업한 졸업생도 한국 대학과 지역을 세계와 잇는 소중한 동문입니다. 교육부가 말한 '의미 있는 다음 삶'이 국내 정주에만 머물지 않도록, 귀국, 제3국 진로와 동문 네트워크의 성과도 정책지표와 인증의 성과지표에 함께 담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부처께 함께 제안드립니다. 한국어교육, 상담, 취업 연계에 필요한 현장 인력과 자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해 지역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 가는 대학의 노력이 인증과 비자 심사에도 반영된다면, 인증제와 비자, 정주 여건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경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대학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유학생에게는 한국에서 배우고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대학도 기준을 따라가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이 변화를 함께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2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학 | 경북대학교 국제처장

토론문 2

이 학 (경북대학교 국제처장)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국제화 확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학생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도 최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치, 교육, 성장, 정주 등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Ⅰ. 유학생 유치 현황 및 질적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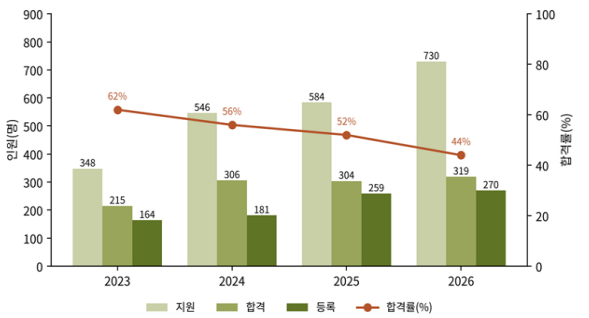
1. 유학생 유치 현황

최근 4년간 경북대 학부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는 2023년 348명에서 2026년 73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등록자도 164명에서 27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합격률은 62%에서 44%로 낮아졌다. 지원자가 늘어난 만큼 선발은 더 엄격해졌다는 뜻이다.

학부 외국인 특별전형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지원	합격	등록
2023	348	215 (62%)	164 (47%)
2024	546	306 (56%)	181 (33%)
2025	584	304 (52%)	259 (44%)
2026	730	319 (44%)	27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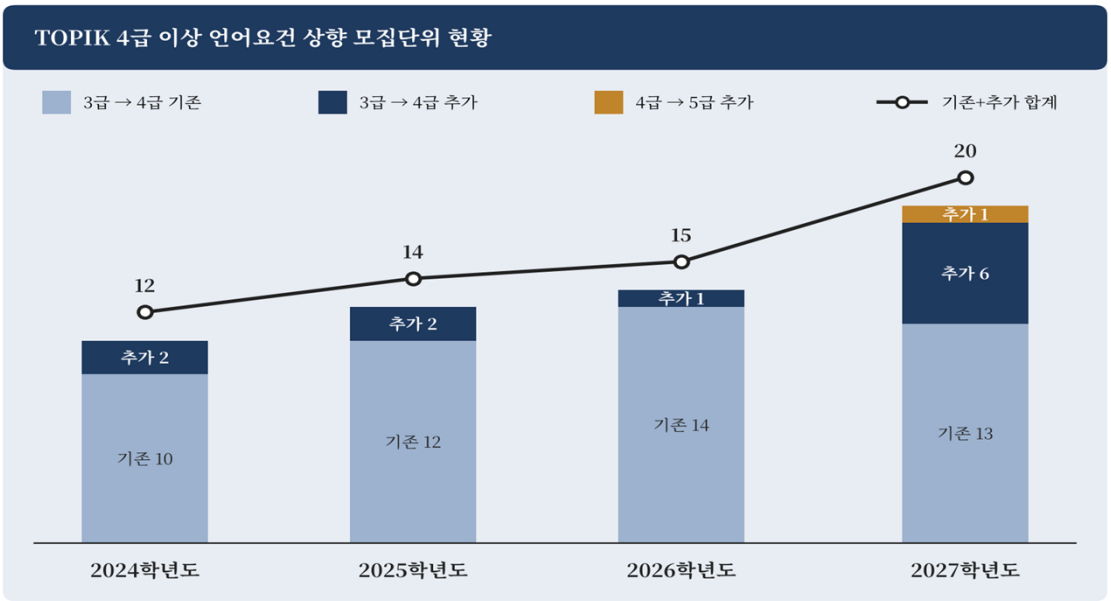


※ 각 연도는 1학기와 2학기를 합산한 수치이며, 괄호 안은 지원자 대비 비율이다.

2. 학과별로 강화되는 입학 언어요건

외국인 학생의 학업 성과를 높이려면 입학 단계에서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학 차원의 기본 자격요건은 TOPIK 3급 이상,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 3급 이상 수료, 일정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해외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일정 수준 이상 이수 등 총 5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 자격요건과 별도로 최근에는 전공별 특성과 학업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요구하는 모집단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는 TOPIK 3급에서 4급으로 기준을 상향한 모집단위가 2개였으며, 2026학년도에도 1개 모집단위가 추가되었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TOPIK 3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는 모집단위가 6개, 4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는 모집단위가 1개로, 총 7개 모집단위에서 언어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언어능력 기준의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학생 유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입학 단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능력을 확보하고, 전공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질적 관리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Ⅱ.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전공 진입을 위한 교육체계 강화

1.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전공 진입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 교육 내실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하는 기관을 넘어,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유학생 수의 양적 확대를 넘어 체계적인 교육과 학업 성과를 중심으로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유학생 선발부터 입학 후 교육, 전공 진입까지 연계된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북대학교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2027학년도 3월부터 글로벌자율학부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약 50명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100명 이상의 학생이 지원한 상황으로, 국제입학팀에서는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 의지와 기초학업 역량 등을 검증하여 전공 수학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자율학부는 입학 후 첫 1년을 2학년 전공 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통해 전공 수업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높이고, 전공탐색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 이수에 필요한 기초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학생별 학업 성취도와 수업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할 것이다.

결국 글로벌자율학부 운영 성과는 유학생 선발 규모보다 학생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 수학능력을 갖추고, 2학년 전공과정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데 있다. 국제교육팀은 한국어 교육, 전공탐색 및 기초 교양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유학생의 학업 부적응과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 경쟁력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Ⅲ.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 지원 강화

1.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지원체계 개선 및 K-STAR 비자트랙 활용한 정착 지원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과 학업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체류 관련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도 중요하다. 최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소요기간이 기존 약 60일에서 약 40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대학 담당자와 출입국기관 간에도 원활한 소통과 업무 협조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졸업 이후에도 국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대상 체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 확대와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K-STAR 비자트랙 우수인재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 유학생 및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대학 총장의 추천을 통해 거주비자(F-2-7S) 취득을 지원하며, 기존 졸업 후 일정 기간 취업자격(E-7)을 유지해야 거주자격(F-2)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방식과 달리 별도의 취업 요건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거주비자(F-2-7S)로 3년간 체류한 경우 영주비자(F-5-S1) 취득 또는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취업활동도 허용하는 등 우수인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국내 정착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2025년 10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최종 선정 대학에 포함되었다. 2026년 1학기에 처음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24명의 우수인재를 선발하였다.

앞으로도 K-STAR 비자트랙을 비롯한 우수인재 대상 체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에서 양성한 우수 외국인 인재가 졸업 이후에도 국내에서 연구와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 현재 대학의 역할과 범위 등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추천을 하기에 제한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 외국인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경북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체류관리 우수사례

경북대학교는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불법체류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4년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3년 1,087명에서 2026년 1,351명으로 약 24.3% 증가한 반면, 불법체류율은 같은 기간 0.59%에서 0.074%로 감소하였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불법체류율 현황▐

(단위: 명, %)

연도	외국인 유학생 수	불법체류율
2023년	1,087	0.59
2024년	1,094	0.51
2025년	1,249	0.38
2026년	1,351	0.074

이러한 성과는 유학생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체류기간 관리와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학생의 체류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유학생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대학의 체류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과 출입국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관련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체류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이제 단순한 유학생 유치 확대를 넘어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 나아가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학업 역량과 언어능력을 고려한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입학 이후에는 한국어 교육과 전공교육, 학업 및 생활 지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체류관리와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유학생이 졸업 이후

에도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대학의 유학생 교육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별 여건과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학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유학생 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했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대학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배우고 성장하여 졸업 이후 우리 사회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정착했는지에 달려 있다. 대학과 정부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넘어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것이다.

종합토론 3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주연 | 동서대학교 국제처장

토론문 3

정주연 (동서대학교 국제처장)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국제처장입니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라는 중요한 주제를 두고 귀한 발표를 해 주신 교육부와 법무부 두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비수도권 사립대학 국제처 현장의 시각에서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Ⅰ. 총평

유학생은 2023년 18.2만 명에서 2026년 30.7만 명으로 늘어 「Study Korea 300K」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중도탈락률 감소(5.8%)와 취업률 상승(33.4%) 등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의 초점을 '유치 규모'에서 '교육경험과 기회'로, 법무부가 비자 정책을 '유치'에서 '성장·정주'로 전환한 방향에 깊이 공감합니다. 두 발표는 유학생을 단순 충원 자원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력 검증, 유학원 관리, 한국어 교육, 편법 운영 차단, 지역 정주 지원이라는 핵심 과제를 공유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두 부처의 새 제도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동시에 현장에 적용됩니다. 대학의 새 업무인 유학원 정보 입력(2026년 하반기)과 시간제취업확인서 발급(2027년 상반기)이 먼저 시작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FIMS 고도화(2028년 상반기)와 권역별 비자·체류지원센터(2028년 하반기)는 뒤늦게 구축됩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두 제도의 일정과 창구를 통일하고 대학의 역할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Ⅱ. 논점별 의견과 질의

첫째, 유학생 교육의 질적 성장에 상응하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53.9%이고 학교 도움을 받는 비율은 15.1%에 그치며, 법무부도 전담 인력 부족과 잦은 교체를 짚었습니다. 인증제 5주기(2029~2032) 주요 지표 필수화와 대학별 비자관리 역량 평가(2028년) 등 규제는 강화되는 데 비해, 우수대학 지원은 비자 간소화와 홍보·행정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학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전담 인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질의**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에 불리한 ‘내국인 학생 비율’ 지표를 보정할 방안과 유학생 수 대비 상담 인력·예산 지원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모집·입학 단계의 검증 강화와 대학 자율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43.6%가 유학원을 활용하는 만큼 검증과 관리 강화는 필요하나, 유학원 등록제(2027년 하반기)와 주요국 학위정보 DB(2028년 상반기)가 갖춰지기 전까지 대학에 1차 검증 책임이 집중되면 행정 부담과 비용이 커집니다. 한국어 미보유자 유학경비 보증제 확대 등 재정입증 차등화도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 **질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히 검증했음에도 추후 허위 학력이 드러날 경우 대학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교육부 표준협약서와 법무부 표준 계약서를 통합하고, 등록 유학원 명단과 학위정보 DB를 FIMS에서 즉시 조회하도록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셋째, 유학생 취업 지원과 비자제도의 실질적 연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사 졸업생의 국내 체류 비율(28.2%)은 전문학사(73.6%)보다 낮으나, 신설 취업경로는 전문학사(E-7-4)와 석·박사(K-TECH Master)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기업 1:1 매칭으로 도내 정주율 67.5%를 거둔 사례처럼, 출입국관리법상 대학·지자체 취업알선 근거 마련이 실제 취업과 비자 연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 **질의** ‘이공계 학사 이상 E-7 전환’이 최종 계획에 반영되는지, 4년제 학사 전용 경로를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어 미충족자에 대한 구직비자 점수제(최대 2년)에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실적 반영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까?

넷째, 유학생의 다양한 유학 목적을 인정하는 투 트랙 교육·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학사 71.8%, 박사 81.3%가 졸업 후 출국하는 현실에서 한국 정주 희망자에게는 한국어·지역산업 교육을, 글로벌 역량 희망자에게는 영어트랙과 공동교육과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어 역량이 중요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전공 학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AI 통번역 시대에 언어 선택 자율성과 질 관리를 함께 높여야 합니다.

원어민 교원, 국적 다양성 등 질적 기준을 충족한 학부 영어트랙과 해외 대학 협약 기반 공동교육과정의 이중언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경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해외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 유입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동·복수학위 과정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 수단입니다. 동서대학교는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베트남 국민경제대학교, 리투아니아 미콜라스로메리스대학교, 인도네시아 페트라크리스찬대학교 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매년 400명 이상의 유학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협력대학과 선발부터 학업 관리까지 공동 수행하므로 유학원 의존을 줄이고 학력 검증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시차수업 예외 검토와 온라인 과정 전용 복수비자 신설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 **질의** 공동교육과정 학생에게 학력 검증 간소화나 비자 심사 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델을 일반 학부과정까지 확대할 때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지역대학의 유치와 지역 정주를 잇는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취업 희망 유학생의 60% 이상이 서울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지역 정착 여건 조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광역형 유학비자 시범사업은 배정 인원(4,600명) 대비 취득 인원이 절반(2,236명)에 못 미쳤고, 지역기업 추천 우대와 동반가족 지원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기업 채용과 비자 연계 과정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요건이 적용될 경우, 부산 등 지역 산업 현장에서 중국·베트남 등 주요 유학생 출신 인재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큽니다. 대학·지자체·기업·출입국기관이 지역 인력 수요와 임금 여건을 반영해 교육부터 취업·정주까지 함께 책임지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 **질의** 광역형 비자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과 함께, 지역 기업 여건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요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탄력 적용이나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수학과 인증·우수인재역량 보증제 졸업생의 비자 전환 시 실제로 어떤 우대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질적 전환이 대학 규제와 책임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실 운영 차단을 위한 모집 제한과 시정명령 근거 신설에는 동의하나, 정책의 성패는 유학생의 성장과 사회 기여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 확인서 기반 시간제취업과 포괄적 시간제취업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대학의 행정 부담과 사후 관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대학은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된 창구를 각각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 JASSO나 프랑스 Campus France처럼 대학과 유학생이 한곳에서 비자·학사·생활 상담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창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질의** 교육부와 법무부, 지자체로 분산된 유학생 관련 행정·평가·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학과 유학생이 단일 창구에서 비자·학사·체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Ⅲ. 맺음말

오늘 두 발표를 통해 유학생을 '교육'과 '비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은 유학생 정책의 성패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동서대학교도 학력 검증과 유학원 관리, 한국어 교육, 지역 기업 연계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정부와 대학 간 공감대를 넓히고, 유학생의 다양한 유학 목적을 존중하며 유치부터 정주까지 잇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4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조요한 |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 부원장

토론문 4

조요한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 부원장)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와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교육부와 법무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부처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이제 양적 유치 중심에서 교육의 질적 성장과 취업·정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유학생의 유치, 교육, 진로와 생활을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유학에서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대학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 대학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 학업 적응, 생활관리,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비해 전문인력과 재정, 지역기업과의 연계체계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방대학이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하는 기관을 넘어 교육하고 성장시키며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Study Korea 300K Project」는 당초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2026년에 이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기존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업과 정주까지 연계하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양적 성장의 중단이나 축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대학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진 친한(親韓) 인재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의 유학생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 역시 한국과의 경제·문화·교육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글로벌 인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취업과 정주뿐 아니라 귀국 유학생을 활용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까지 유학생 정책의 성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수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학생 유치 현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과 비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 유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로 유학 목적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력 관련 서류에 대해 한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사확인 신청이 원활하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정해진 입학 일정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여,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학업능력과 한국 유학 의지를 갖추고도 실제 유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고 학생 역시 한국 유학을 희망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유학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경우 한국 유학에 대한 신뢰와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학생들은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대학을 비교하여 유학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입학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행정적 지연은 한국 유학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력 위조와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학업능력과 유학 목적을 철저히 검증

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유학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정상적인 우수 유학생의 유학 기회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선발과 비자 발급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별 행정 여건과 서류 발급 환경을 고려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법무부, 외교부가 협력하여 국가별 학력 검증 절차를 표준화하고, 대학이 입학심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학력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가 이번 발표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해외학력 및 학업능력 검증체계 구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제 유학생 모집을 담당하는 대학과 해외 지원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확대

교육부는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부터 공인언어능력 충족률을 필수지표로 강화하고, 그 기준을 2029년 55%에서 이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가 체류관리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한국어 능력과 교육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대학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이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토론과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수자는 수업 운영과 학습 수준 조정에 부담을 느끼고, 한국 학생들 역시 공동학습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강화는 단순히 인증제 지표를 충족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과 학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의 한국어 교육환경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일부 국가에서 연간 응시 기회가 제한적이고 응시 수요가 많아, 학생이 한국어 학습을 충실히 하더라도 입학 시기에 맞추어 공인성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응시하고

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횟수와 응시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와 비자제도의 실효성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 현장에서는 졸업 이후의 취업과 정주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는 학생을 유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유학 국가와 대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는 단순히 졸업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가 이번 발표에서 제시한 '유학-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비자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원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방대학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정보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기업의 채용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자신의 전공과 역량으로 어떤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취업을 위해 어떤 체류자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업 행사가 연중 제한된 횟수로 개최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기업을 접하고 채용 기회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과 한국어 능력, 체류자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일회성 취업행사에서 벗어나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활성화하고, 지역기업의 채용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및 역량을 연결하는 상시적인 취업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비자 변경 과정의 불확실성이 실제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있

고, 지역대학에는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지역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을 연결하여 채용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도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고 심사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이 가능한지, 언제부터 근무할 수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충원을 장기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역시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찾았음에도 비자 변경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어 취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역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외국인 유학생은 구직난을 겪고 있음에도 양측의 수요가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학력,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임금 수준, 기업의 고용 요건 등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실제 채용 단계에서야 이루어지거나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기업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취업비자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상담·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할 때는 신속하게 체류자격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채용 경험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 직종, 임금 기준, 제출서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기업의 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대학에서 성장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함께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취업과 정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5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형주 |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국제협력위원장(호서대 교수)

토론문 5

이형주 (한국국제교육교류학회 국제협력위원장, 호서대 교수)

두 발표는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에서 “어떤 교육경험과 경로를 제공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교육부 발표가 ‘유학생(留學生)’을 머무름(留)·배움(學)·삶(生)으로 풀어낸 대목은 유학생 정책의 중심이 결국 ‘배움’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며, 법무부 발표는 4개 단계·16개 중과제·42개 실천과제로 ‘유치’에서 ‘성장·정주’로의 전환을 구체적 비자 경로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비수도권 대학원에서 중국 유학생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과정 평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술적 근거와 해외 사례에 비추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1. 가장 효율적인 사전 통합 기관으로서의 대학: 정주 및 사회통합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 한국어·사회통합 교육, 취업·주거·복지 지원, 지역사회 수용과 갈등 조정 등 사회통합을 위한 공적 자원이 투입된다. 이 자원은 다른 정책에 쓰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기회비용이다. 유학생을 ‘학생’이자 ‘잠재적 이주민’으로 보는 교육–이주 넥서스(Robertson, 2013) 관점에서 보면, 유학생은 이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이민 경로가 될 수 있다. 재학 기간 동안 대학을 통해 한국어, 국내 학위, 사회적 관계망,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미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은 정주 이전 단계에서 통합을 미리 수행하는 ‘사전 통합(pre-integration)’ 기관이다.

해외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호주의 2단계 이주 연구(Hawthorne, 2010)는 현지 학위와 언어능력을 갖춘 유학생 출신 이주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해외에서 직접 선발한 인력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보였고, 독일 Stifterverband·DEGIS(2026)의 조사는 독일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구직 목적으로 직접 입국한 사람보다 취업 가능성이 3배 높고 통합이 더 쉬우며 잔류 의

향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한 코호트의 40%만 잔류해도 이들의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졸업 3년 만에 고등교육 비용이 회수되고, 코호트당 생애 순기여가 약 155억 유로에 이른다고 추계하였다(Geis-Thöne & Plünnecke, 2025). 통합에 드는 비용보다 사회적 기여가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효율성은 재학 중 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만 성립한다. 교육부 조사에서 생활상 어려움을 "혼자 해결"한다는 유학생이 53.9%, "학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15.1%에 그치고, 법무부 자료에서 졸업자의 약 70%(박사 81.3%)가 완전출국하고, 국내 취업자의 절반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그중 90%가 수도권에 취업한다는 사실은, 대학 단계에서의 통합 투자가 지역 정주로 회수되지 못하거나 통합 비용이 졸업 후 지역사회로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 재학 단계를 사회통합의 '가장 비용 효율적인 시점'으로 정책화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학점 인정 등), ② FIMS 통합 프로파일의 한국어·사회통합 이력을 비자 단계 전환에 반영, ③ 유학생 경로와 다른 이민 경로의 사회통합 비용·재정 기여를 비교하는 공동 추계 연구를 교육부·법무부·대교협이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

2. 교육과정에서 결정되는 '학(學)'의 질

교육부가 5주기 인증제(2029~)에서 '운영 실적' 대신 '학습·교육성과와 개선 노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다. 다만 성과 지표가 공인언어능력 충족률(2029년 55%), 중도탈락률 등 '최소 기준' 중심에 머문다면 인증제는 부실을 걸러내는 문턱 장치에 그칠 수 있다. 앞서 본 "학교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15.1%에 그친 것은 지원이 수업·지도교수·학과라는 학업 동선 바깥에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생 이탈 연구(Tinto, 1993)가 보여주듯 학업 지속을 좌우하는 것은 학업적·사회적 통합이며, 그 핵심 무대는 강의실과 연구실이다.

해외에서도 학업 단계의 지원이 정착을 좌우한다는 근거가 쌓여 있다. 독일 DAAD는 유학생 정착의 핵심 조건으로 '교육과정에 통합된 독일어 교육'을 권고하고, 100여 개 대학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DAAD, 2025). 본(Bonn) 대학의 유학생 진로 프로그램 iStart는 참여자의 취업률이 35%에서 프로그램 종료 시 55%, 종료 3개월 후 70%로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Kercher, 2024). 정책도구론(McDonnell & Elmore, 1987)의 용어로

보면, 현재 정책 조합은 규제와 인센티브에 비해 역량구축 도구가 취약하다. 따라서 ① 전공 연계 학문목적 한국어와 학술 글쓰기의 교육과정 내 학점화, ② 학위과정 단계별(수업-연구계획-논문) 지도 체계를 담은 '유학생 교육과정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 10개 이내의 '우수학과 인증' 모델을 다른 대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연수 등 역량구축 지원을 함께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3. 한국어 능력

법무부가 '한국어 능력의 비자 전반 반영'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타당하다. 호주의 2단계 이주 연구(Hawthorne, 2010)도 유학생 출신 이주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언어능력에 따라 크게 갈림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어 기준이 입국 시점의 문턱으로만 작동하면 전공 역량은 뛰어나지만 한국어가 아직 부족한 대학원 유학생을 놓칠 수 있고, 앞서 본 박사 졸업자의 높은 출국률은 고급 인재일수록 남을 경로가 좁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어 기준을 '입국 요건'과 '재학 중 단계별 도달 목표'로 이원화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이수한 한국어 성과를 시간제취업·구직(D-10) 기간 차등 등 비자 혜택과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K-TECH Master 등 새 경로가 이공계 중심인 만큼 인문·사회·교육 분야 대학원 졸업생의 경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어 과정 관리 강화'(추진과제 4-5)에서 편법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관리 대상에 '출신국 언어 중심 과정'이 포함된 만큼, 판단 기준이 수업 언어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에 놓이기를 바란다. 대면 수업과 논문지도 실적, 한국어의 단계적 이수 구조, 학위논문 심사·연구윤리 관리를 갖춘 이중언어 대학원 과정은 오히려 우수 인재 유치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예외 유형으로 명시된 '대학원 연구·실험·세미나'의 요건을 대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4. 지역·규모가 고려된 두 부처 정책의 '연결부'를 지역이 맡도록

유학생의 경로가 실제로 끊기는 지점은 학업에서 취업으로, 취업에서 정주로 넘어가는 '연결부'이다. 통합의 지표 틀(Ager & Strang, 2008)이 보여주듯 고용·주거·권리 영역은 대학의 권한 밖에 있어, 대학만으로는 이 연결부를 채울 수 없다. 다행히 법무부의 권역별 비자·

체류지원센터(충청권 포함)와 광역형 비자 재설계, 교육부의 우수학과 인증과 중앙-지자체-대학 협업이라는 재료가 이미 있다. 중소 규모 대학이 많은 충청권에서 권역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지자체·기업이 진로지원과 취업 연계를 공동 운영하는 '권역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한다.

해외 사례는 설계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호주는 2026년 국가계획수준(National Planning Level)을 29.5만 명으로 정하면서 신규 학생 주거를 공급하는 대학에 정원을 우선 배정하여, 유치 확대를 통합 인프라 확충과 조건부로 연계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반대로 캐나다는 2026년 신규 유학생 목표를 15.5만 명으로 크게 줄였고, 특히 작은 주의 대학들이 상한제 설계상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ICEF Monitor, 2026). 또한 네덜란드는 졸업 코호트의 1년 후 잔류율을 정기적으로 추적하여(2022년 졸업 코호트 약 57%)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OECD, 2026). 교육부 발표가 지적했듯 유학생의 목적지는 한국 정착, 본국 복귀, 제3국 진출로 다양하므로, 교육부의 종단연구와 법무부의 FIMS 통합 프로파일을 연계하여 학업 지속·전공 연계 취업·지역 정주·귀국 후 활동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결과를 학과 단위로 환류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주는 졸업 이후가 아니라 첫 학기 강의실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가 두 부처 정책의 공통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질문

[교육부]

5주기 인증제에서 평가할 '학습·교육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대학 단위를 넘어 학과 단위 교육과정의 질까지 반영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자 한다.

연 10개 이내로 계획된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에 비수도권·중소 규모 대학과 인문·사회 분야도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선정 시 교육과정의 질과 취업·정주 성과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지 여쭙고자 한다.

[법무부]

시간제취업의 대학 확인서 기반 처리 등 대학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대학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범위와 이를 뒷받침할 행정·인력 지원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자 한다.

[공통]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와 법무부의 '대학별 유학생 비자관리 역량 평가'(2028년)가 별도로 운영될 경우 대학은 유사한 평가를 이중으로 받게 된다. 두 평가의 지표와 절차를 통합하거나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자 한다.

참고문헌

Ager, A., & Strang, A.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8. 4.). Managed growth for a sustainable international education sector.

DAAD (2025). Internationale Studierende wollen bleiben: Große Chancen für den deutschen Arbeitsmarkt [Pressemitteilung].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Geis-Thöne, W., & Plünnecke, A. (2025). Internationale Studierende stärken öffentliche Finanzen und Wachstum (IW-Kurzbericht Nr. 27/2025).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Hawthorne, L. (2010). How valuable is "two-step migration"? Labor market outcomes for international student migrants to Australi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9(1), 5–36.

ICEF Monitor (2026. 10. 15.). What is happening with international student numbers in Canada so far this year?

Kercher, J. (2024. 4. 9.). International students: Key for the German labour market.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EAIE).

McDonnell, L. M., & Elmore, R. F. (1987). Getting the job done: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9(2), 133–152.

OECD (2026). Internat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rends,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in Australia, Canada,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005ff28d-en

Robertson, S. (2013). Transnational student-migrants and the state: The education-migration nexus. Palgrave Macmillan.

Stifterverband & DEGIS (2026). Zwischen Abschluss und Anschluss: Internationals Employability Framework (Discussion Paper Nr. 3/2026). Stifterverband für die Deutsche Wissenschaft.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2026). 30만 유학생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7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발표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6).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계획. 제7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발표자료.

종합토론 6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현주 | 한양대학교 국제입학팀장

토론문 6

김현주 (한양대학교 국제입학팀장)

1. 들어가며: '유학생 40만 시대'를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이제 단순한 대학의 정원 보완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첨단·지역 산업을 지탱할 핵심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329,760명에 도달하며 이미 '유학생 30만 시대'를 넘어 4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는 '얼마나 많이 데려올 것인가'라는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누구를 어떻게 교육하고 함께 성장·정주시킬 것인가'라는 질적 전환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겨야 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지표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학위과정 졸업생의 졸업 직후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학사의 71.8%, 석사의 71.3%, 박사의 81.3%가 졸업과 동시에 완전 출국하고 있으며 체류 자격 기준 취업률은 34.3%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전체 유학생의 77%가 베트남(45%)과 중국(32%)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은 고등교육 국제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유학생 유입이 가장 활발한 수도권 대학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입학부터 학업, 취업, 정주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질 관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2. 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질적 전환 방향

가. [유입 단계] 입국 전 사전 검증 고도화와 유치 거점의 다변화

유학생 교육의 질은 입학 선발 단계에서부터 결정됩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어 능력 기반 재정입증 차등화'와 국가학위정보센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표준 해외학력 검증

체계'는 현장의 부실 유치를 차단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입학심사 단계에서부터 학위·학력 서류의 진위와 실질적인 수학 역량을 검증하고, '해외 유학원 등록제'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적극 동참하여 허위 서류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유학생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국가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아세안, 미주·유럽 등으로 유치 거점을 다변화하고, 새롭게 개편·신설되는 단기유학(D-2-8), 갭이어 학생 비자, 온라인 과정 전용 복수비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교육 교류의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

나. [체류 및 성장 단계] 한국어와 학업 성실성 기반의 엄격한 학사 관리

입학 이후 유학생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어 트랙이나 주말·야간·온라인 과정의 편법 운영을 엄격히 배제하고, 본과 수업 적응을 돕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기초 전공 튜터링을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도입하는 '대학 발행 확인서 기반 시간제취업 허가 간소화' 및 '포괄적 사전허가제'의 취지에 맞춰,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실성을 갖춘 성실 유학생에게는 합법적 현장 경험을 폭넓게 열어주되 학업 이탈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기에 관리하는 책임 있는 체류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다. [취·창업 및 정주 단계] 인재 스펙트럼별 맞춤형 진로 및 비자 성장사다리 연계

고급 인재의 높은 졸업 후 출국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학 중 진로 설계와 비자 제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수도권 대학은 학사, 전문기술석사, 구직비자, 기술창업으로 이어지는 법무부의 다층적 '비자 성장사다리'를 대학의 진로·취업 지원 체계와 직접 연동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인재가 졸업 전부터 기업 현장을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3. 현장 사례: 한양대학교 하이올 시스템(HY All-Care System)

한양대학교는 양적 팽창을 넘어 '검증된 우수 인재 유치와 전 주기적 밀착 관리'를 핵심 기조로 삼아 현장 중심의 선도적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들이 단순히 학위만 취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학부터 캠퍼스 안착,

그리고 졸업 후 글로벌 커리어 완성'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이후의 커리어 설계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태계인 하이올 시스템(HY All-Care System)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 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로드맵 제공: 유학생 전용 취업 가이드북 제작,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한국 기업 면접 특강, 그리고 졸업 후 취업 비자(D-10, E-7 등) 전환 설명회까지 실질적인 구직 역량을 강화합니다.

나. 국내 주요 기업 채용 박람회 및 산학협력 인턴십: 매 학기 유학생 전용 채용 박람회(Job Fair)를 개최하여 유학생 채용 수요가 높은 국내 대기업 및 중견·강소기업과 직접 연결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지자체 및 산업계와 연계한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 기업 문화를 사전에 경험하고 정규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연계: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인재들을 위해서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 내 우수 기업 취업 매칭 및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수도권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정책 제언

가. 수도권 대학이 감당해야 할 4대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도권 대학은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 고등교육 브랜드의 '질 보증(Quality Assurance)' 책무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학별 유학생 비자 관리 역량 평가' 및 '적정규모 관리체계' 도입에 발맞춰, 무분별한 정원 확대를 지양하고 엄격한 입학 검증과 공정한 학사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Study in Korea' 전체의 대외 신뢰도를 견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전하고 투명한 유학 모집 질서를 확립할 의무입니다. '해외 유학원 등록제'와 '표준입학허가서 내 유학원 정보 필수 입력' 제도를 선도적으로 준수하고 현지 유학원 교육을 강화하여 불투명한 모집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셋째, 유학생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공존의 의무입니다. 유학생을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닌 미래 한국 사회의 동반자로 존중하며, 주거 안정 지원, 의료·법률·심리 상담, 내·외국인 학생 통합 프로그램 및 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비수도권 대학과의 상생 및 운영 노하우 공유의 의무입니다. 수도권 유학생 집중에 대한 지역 대학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며, 수도권 대학이 선도적으로 구축한 해외 학력 검증 노하우, 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학사관리 시스템, 산학협력 취업 매뉴얼을 비수도권 대학과 적극 공유·확산하고, 귀국 졸업생 글로벌 순환 인재 네트워크 구축에도 공동 협력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나. 유학생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현장 정책 제언

법무부가 발표한 42개 실천 과제가 대학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적 보완을 제언합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개정(유학생 비자관리 및 공공목적 취업지원 규정 정비) 시 대학의 취업 알선과 현장실습 지원 활동이 법적 보호 아래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대학 확인서 기반 시간제취업 허가'의 적용 대상을 관리 역량 우수 대학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FIMS)' 고도화 과정에서 표준입학허가서 일괄 생성, 변동신고 일괄 등록, 유학생 통합 경력 프로파일 구축이 각 대학의 학사행정시스템과 API로 원활히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현장 행정 담당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2028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중앙권·경기권 등 권역별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가 단순 비자 심사를 넘어 대학 취업지원센터, 지자체 정주 인프라, 산업계 구인 수요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산학관 협력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기 시범 운영을 건의합니다.

5. 맺음말: 책임 있는 교육 역량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국제화

법무부가 제시한 '유입에서 성장·정주로의 비자 정책 전환'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가장 많은 유학생을 맞이하는 대학의 교육·관리 역량이 튼튼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학생 40만 시대'의 진정한 성패는 외형적 숫자 확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택한 유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와 상생하며 정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대학들은 엄격한 질 관리와 선도적 학생 지원 모델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정부·지자체·비수도권 대학과 긴밀히 연대하여 지속 가능한 유학생 인재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야겠습니다.

종합토론 7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정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팀장, 국가학위정보센터

토론문 7

이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팀장, 국가학위정보센터)

서론

외국인 유학생 300K 정책이 출범한 이후 유학생 수는 2023년 약 18만 2천 명에서 2026년 약 30만 7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모집의 투명성과 학사 운영의 내실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안)」과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개선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유학생 정책의 질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교육부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에 공감하며, 대학사회 역시 교육의 질 제고와 유학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유학생 유치 확대를 넘어 교육의 질, 우수 인재 확보, 졸업 후 진로, 체류 및 사회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학사회의 입장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책무성, 유학생 정책의 다양한 목표, 범정부 협력체계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유학생 정책의 질적 전환과 대학의 교육 책무성 강화

현재 대교협의 국제업무는 국제협력팀과 국가학위정보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에서는 한국 대학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학위정보센터에서는 해외 교육제도와 학력·학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외국인 지원자 입학자격 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규모 확대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로 해외 유학생의 입학 서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국가별로 다양한 학제와 자격체계로 인해 입학자격 심사에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부적절한 학력·학위 인정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번 교육부 정책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법무부 정책에서도 국가학위정보센터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대학의 입학심사부터 비자발급과 사후 재검증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유학생 업무는 입학, 비자발급, 체류관리 등 여러 단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계부처 간 정책과 기준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개별 부처의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부와 법무부의 정책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비자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대학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교협은 올해 초부터 회원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자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법무부는 대학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비자유형 신설 요청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한 대교협은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에 참여하여 재정능력 입증과 시간제취업 등에 관한 회원대학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대학 현장의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관계부처 간 정책을 연계하며, 이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발전시켜 온 과정은 정부와 대학사회 간 협력의 뜻깊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대학사회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 스스로도 유학생 유치와 교육 운영의 적정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정원은 교원·교사·교지 등 교육여건과 연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등은 정원 상한의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입학정원 관리가 대학의 교육 여건에 맞는 학생 선발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외 유학생 선발에 부여된 자율성 역시 그에 상응하는 교육 여건 확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다수 회원대학은 이러한 제도적 자율성 아래에서도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비율 원칙을 세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학생 규모에 비해 교육시설과 지원 인력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여건과 구성원의 입장에 따라 유학생 확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입니다. 실제로 유학생 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교원 확보 등 대학기관평가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외 재학생 비율이 전체 재학생의 8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의 질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학생 확대에 상응하는 교원·시설·학습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이며, 이는 유학생뿐 아니라 대학 전체의 교육 여건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학사회도 유학생 모집 규모와 교육 여건 간의 균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대학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유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교협도 대학사회가 이러한 책임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유학생 정책의 다양한 목표를 고려한 균형적 접근 필요

최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는 국내 취업과 정주 지원이 주요 과제로 강조되는 한편, 교육부는 본국 복귀와 제3국 진출을 포함한 유학생의 다양한 진로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인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국내 취업과 정주 지원은 필요한 방향입니다. 다만 유학생 정책은 인구·이민정책인 동시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교육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학생 3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지만,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를 멈출 단계는 아닙니다. 한국은 높은 문화적 영향력과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중요한 국제교육 서비스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질 관리를 유학생 유입의 축소로 연결하기보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면서 한국 고등교육의 질과 국제적 신뢰를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의 유학 목적과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합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과 정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전문 분야를 공부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진출하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의 학위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는 것 역시 한국 유학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정책의 성과를 국내 취업률과 정주율에 한정하지 않고, 본국 귀환 이후의 활동, 국제 공동연구와 동문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다양성은 유학생 선발과 교육의 질 관리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언어능력 기준입니다. 교육부는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공인언어능력 충족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법무부도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발급 시 한국어 능력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역량 강화는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국내 생활, 취업 및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다만 대학사회에서는 한국어 능력요건 강화가 다양한 교육과정의 특성과 유학생의 수학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영어트랙이나 이공계 대학원 등에서는 한국어능력뿐 아니라 수업 언어에 대한 이해와 해당 분야의 학업·연구역량이 중요합니다.

차주기 인증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학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입학과 학업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업 언어와 실제 학업 수행능력을 고려하고, 국내 취업과 장기 정주 단계에서는 한국어와 사회통합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유학 목적과 진로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학이 체계적인 언어교육과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기반 자막·번역과 다국어 학습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중도탈락률 등 실제 교육성과를 입증한다면 이를 질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와 대학의 교육역량을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대학의 책무성은 강화하되,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3. 범정부 차원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필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출입국·체류, 고용·산업, 외교, 지역정책, 인구문제와 사회통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부처별 정책과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하고, 제도 간 기준이 다르거나 변경 사항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학생에게 일관된 안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별 정책을 연결하고 대학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육부 발제에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체와 유학생 지원기관 지정의 근

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 지원기관 지정과 정책·지원·데이터 연계를 추진하는 방향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대학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고용·산업·외교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협의체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자·체류, 학업·생활지원, 취업·정주, 통계·정보 관리 등 분야별 실무협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 공통으로 겪는 현안을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소관과 개선 방안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대학과 학생에게 전달하는 정책 환류 구조까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대교협이 교육부에 제안한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구상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대학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학허가 이후 비자 발급과 입국·등록, 학업 및 생활 적응, 취업·정주에 이르는 단계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대학 실무자를 위한 상담과 컨설팅, 표준 안내자료와 우수사례 보급 등 개별 대학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통 지원기능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보와 데이터의 연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학정보공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등에 분산된 학사·체류·진로 정보를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연계한다면,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유학생의 경로와 정책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여러 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체가 정책을 조정하고, 전담 지원기관이 정보 제공과 대학 지원, 데이터 연계를 상시 수행하는 구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지원기능의 법적 근거와 안정적인 인력·재정 기반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교협도 회원대학의 사례와 정책 수요를 수렴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전달하고, 협의 결과가 대학의 실제 업무와 유학생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결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와 법무부의 정책은 유학생의 선발과 교육, 체류와 진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대학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은 유학생 확대에 상응하는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학생의 다양한 학업 목적과 진로, 대학별 교육과정의 특성이 구체적인 정책 기준과 운영 과정에도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과 대학 지원체계도 중요합니다.

대교협은 앞으로도 대학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학생 정책이 대학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고등교육 경험이 유학생 개인의 성장과 진로를 넓히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사회와 함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memo

memo

memo

memo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7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2026년 11월 발행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 소 (08504)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홈페이지: http://kcue.or.kr
전화: 02-6919-3800

인 쇄 처 경성문화사(02-786-2999)

(C)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비매품〉
*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